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2.2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인도

연방 예산안: 단기 부양보다 중기 성장 기반 강화

- 재정 건전화 속도를 완화하는 대신, 인프라, 국방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에 초점
-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STT) 인상에 따른 단기 주식시장 조정 발생, 재정 확충 목적보다는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파생 거래 및 손실 확대 억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로 판단되며, 주가 조정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내수 중심 업종의 펀더멘털 개선이 시장 흐름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

FY27 인도 연방 예산안 분석: 단기 부양보다 중기 성장 기반 강화

2월 1일 인도 정부는 FY27년(2026년 4월~2027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연방 예산안이란 인도 정부가 향후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용 방향과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정부 공식 자료이다. 매년 2월 초에 발표되며,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될 세입·세출 계획, 재정적자 목표, 조세 정책 방향, 주요 산업 투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중기적인 성장 기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설비투자(capex) 중심 정책 기조가 재개되었다는 점이다. 재정 건전화 속도를 다소 완화하는 대신, 인프라, 국방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다만 재정 건전화 속도 완화는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금융, 부동산 등 금리 민감 업종에는 단기적으로 소폭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상대로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되었던 소비세 인하 등 소비재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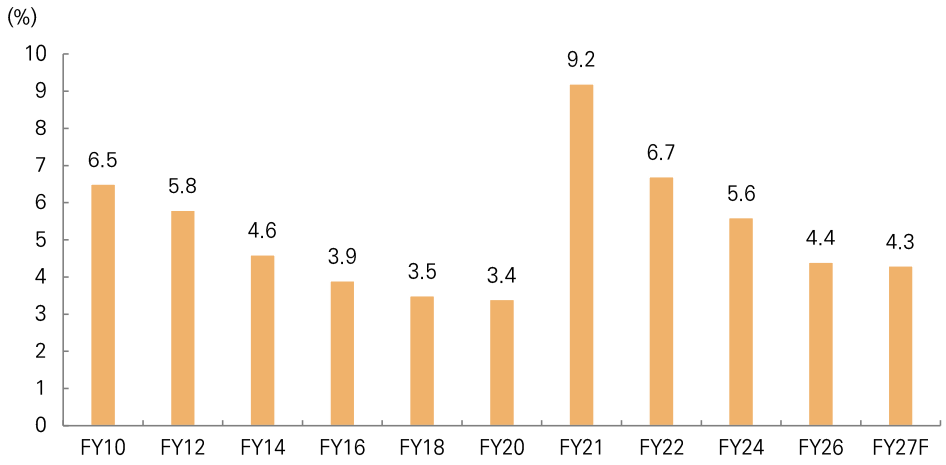
한편, 인도 정부는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STT) 인상도 함께 발표하였다. 선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STT)는 기존 0.02%에서 0.05%로, 옵션 거래에 대한 STT는 0.10%에서 0.15%로 각각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예산안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파생상품 거래세 인상은 재정 확충 목적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 및 손실 확대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FY27 재정적자 목표: 완만한 축소 기조 유지

FY27년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4.3%로 설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bp 축소에 그쳐, 지난 2년간 누적 230bp 축소되었던 재정 건전화 속도에 비해 둔화된 수준이다. 다만 이는 인도 정부가 지속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과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된다.

그림 1. 인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자료: 인도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재정 기조 완화 속 자본 지출 우선 전략

재정 건전화 속도 완화에 따라 FY27년 정부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7%로, FY26 대비 약 1%p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조금 등 경상지출 중심의 경상지출(+5.6% YoY)보다 인프라 및 설비투자 중심의 자본지출(+11.5% YoY)을 명확히 우선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지출과 중앙정부 경상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 자본지출 규모는 12.2조 루피로 확대되며, GDP 대비 비중도 3.1%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8%)와 철도(+10%) 부문의 투자가 비교적 균형 있게 확대될 전망이며, 국방 설비투자는 FY26년 16% 성장에 이어 FY27년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가 계획되어 있다.

표 1. 주요 예산 하이라이트 – 지출 항목별 내역

항목	FY25	FY26 수정치	FY27 예산	전년 대비 (YoY)			비중(%)		
				FY25	FY26 수정치	FY27 예산	FY25	FY26 수정치	FY27 예산
연금	2,738	2,866	2,962	14.9	4.7	3.3	5.9	5.8	5.5
방위	4,507	5,679	5,946	1.4	26.0	4.7	9.7	11.4	11.1
비료	1,707	1,865	1,708	-9.4	9.3	-8.4	3.7	3.8	3.2
식량	1,999	2,282	2,276	-5.6	14.2	-0.3	4.3	4.6	4.3
석유	145	151	121	18.3	4.1	-19.9	0.3	0.3	0.2
농업	1,546	1,519	1,627	5.9	-1.7	7.1	3.3	3.1	3.0
상공업	444	523	703	-10.8	17.8	34.4	1.0	1.1	1.3
북동부 지역 개발	34	45	68	107.1	32.4	51.1	0.1	0.1	0.1
교육	1,107	1,219	1,393	-10.2	10.1	14.3	2.4	2.5	2.6
에너지	661	865	1,090	26.0	30.9	26.0	1.4	1.7	2.0
외교	255	217	221	-11.8	-14.9	1.8	0.5	0.4	0.4
재무	582	1,122	206	148.8	92.8	-81.6	1.3	2.3	0.4
보건	884	946	1,046	8.3	7.0	10.6	1.9	1.9	2.0
내무	2,246	2,415	2,552	14.1	7.5	5.7	4.8	4.9	4.8
IT 및 통신	1,172	539	746	42.4	-54.0	38.4	2.5	1.1	1.4
이자 지급	11,156	12,743	14,040	4.9	14.2	10.2	24.0	25.7	26.3
농촌 개발	2,060	2,128	2,731	-14.6	3.3	28.3	4.4	4.3	5.1
과학 부처	275	370	558	11.6	34.5	50.8	0.6	0.7	1.0
사회 복지	458	501	624	8.9	9.4	24.6	1.0	1.0	1.2
조세 행정	2,028	745	455	6.0	-63.3	-38.9	4.4	1.5	0.9
교통	5,602	5,476	5,985	6.3	-2.2	9.3	12.0	11.0	11.2
도시 개발	533	572	855	-22.3	7.3	49.5	1.1	1.2	1.6
기타	4,392	4,861	5,560	8.9	10.7	14.4	9.4	9.8	10.4
총계	46,529	49,648	53,473	4.7	6.7	7.7	100.0	100.0	100.0

자료: 연방 예산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중앙정부 자본지출 구성항목

항목	FY26 수정치	FY27 예산	전년 대비 (YoY)	비중(%)	
			FY27	FY26 수정치	FY27 예산
도로교통·고속도로	2,721	2,942	8.0	24.8	24.1
철도	2,520	2,778	10.0	23.0	22.7
주정부 이전	1,750	2,264	29.0	16.0	18.5
국방	1,974	2,310	17.0	18.0	18.9
주택·도시개발	330	348	6.0	3.0	2.8
통신(BSNL 제외)	181	201	11.0	1.7	1.6
원자력에너지	121	100	-17.0	1.1	0.8
기타	936	971	4.0	8.5	7.9
바라트 산차르 니감(BSNL) 자본 확충	69	285	314.0	0.6	2.3
신규 사업	357	20	-94.0	3.3	0.2
총 자본지출	10,958	12,218	12.0	100.0	100.0

주: 바라트 산차르 니감(BSNL): 인도 중앙정부가 100% 소유한 국영 통신사
자료 연방 예산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

이번 연방 예산안은 정부 재무구조를 강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내수 중심 업종의 펀더멘털 개선이 시장 흐름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업종별로는 이번 예산안이 인프라 설비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시멘트 업체, 그리고 국방 투자 확대에 따른 방산 기업들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심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재정 건전화 속도 완화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은 은행, NBFC, 증권 업종 등 금리 민감 업종에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NBFC 및 자본시장 관련 기업은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STT) 인상 영향으로 단기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거래 심리 및 단기 수익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주요 금융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